
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

2026. 3. 26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현 상황 평가	1
II. 대응방안	2
1.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	3
2. 공급망 관리	6
3. 취약부문 피해 지원	8
4. 외환 · 금융시장 안정	12
[참고]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	13

I. 현 상황 평가

□ 전쟁 4주차 접어들며 **국제유가·금융시장 변동성** 크게 확대

○ **(에너지)**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국제유가 급등

* Brent유(불/배럴): ('26.2.27) 72.5 (3.12) 100.5 (3.17) 103.4 (3.25) 99.2 <2.27일비 +41%>

- 국내석유제품 가격은 **최고가가격제** 시행(3.13일) 이후 하락.
다만,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

* 휘발유(원/L): (2.27) 1,693 (3.12) 1,899 (3.25^{19시}) 1,819 <3.12일비 △80원>

경유(원/L): (2.27) 1,597 (3.12) 1,919 (3.25^{19시}) 1,815 <3.12일비 △104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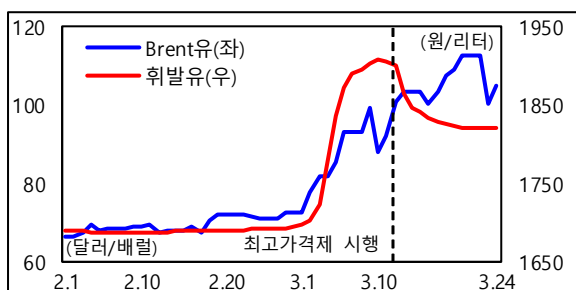
○ **(시장)** 주가는 상황 전 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 중이나 연초 대비 주요국보다 높은 상승률, 환율(원/\$)·금리는 큰 폭 상승

* 상황전(2.27일) 대비 3.25일 : 韓 △9.6% / 臺 △5.6%, 日 △8.7%, 中 △5.6%, 美 △4.7%
(‘26년초 대비 3.25일 : 韓 +33.9% / 臺 +15.5%, 日 +6.8%, 中 △0.9%, 美 △4.2%)

○ **(산업)** 수출中企의 운송차질, 물류비 부담 등 애로사례 증가, 나프타·요소* 등 중동 高의존 품목 수급차질 우려

* (나프타) 중동의존도 70%+ 최근 가격 급등('26.2월말비 +67%) / (요소) 카타르(비료용 비중 20%) 생산차질

국제유가 및 국내휘발유 가격



주요 금융·외환시장 지표

	2.27일	3.10일	3.25일	(2.27일비)
코스피(pt)	6,244	5,533	5,642	(△9.6%)
국채금리(3y, %)	3.041	3.283	3.558	(+52bp)
환율(원/달러)	1,440	1,469	1,500	(△4.0% ^{절하})

□ 상황 **장기화** 시, 유가 급등, 수급 차질 등으로 성장 둔화, 물가 상승, 민생 악화, 공급망 불안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**국내경제 (-) 영향** 확대 우려

○ 특히, 서민·소상공인(에너지 소비비중 高), 中企·농민(고유가+나프타·요소 차질)·지방(석화 등 산업·고용 악화) 등 취약부문 타격으로 양극화 심화 우려

Ⅱ. 대응방안

대응 기조

“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
어렵게 되살린 경제·민생 회복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
정책수단 총동원 + **최적 정책조합**으로 단계별 대응”

정책 방향

가용자원·수단을 총동원해 신속 대응

즉
시

1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

- ① 유가상승 적극 대응
- ② 에너지 수급관리 및 에너지 절약
- ③ 공공요금·민생물가 안정적 관리

2 공급망 관리

- ① 공급망 대응 거버넌스 강화
- ② 핵심품목 수급관리

3 취약부문 피해 지원

- ① 중동관련 피해기업 직접 지원
- ②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
- ③ 취약업종·지역 지원

4 외환·금융 시장 안정

- ① 외환 시장
- ② 증시·채권 시장

4
월

초과세수 활용한 **25조원** 수준 “전쟁 추경”으로 대응 강화
- 고유가 타격 크고 소비성향 높은 취약계층·지방 등에 직접·차등·지역화폐 지원 ⇒ 내수·민생 회복, 에너지 수요관리 + 재분배 효과 기대
- 국민 체감 원칙 하에 ①고유가 부담 완화, ②민생안정, ③산업 피해 최소화, ④공급망안정, ⑤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·효과적으로 투입

5
월 ?

상황 장기화 시 경제·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선제적 준비·시행

1.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

◇ **최고가가격제, 유류세 인하, 수급관리 강화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** 등으로 **에너지 가격 안정**을 유도하고 **공공요금·민생물가 안정적 관리**

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, 유류세 인하 등으로 유가 상승에 적극 대응

① **(최고가가격제·유류세)**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산업·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 최소화

→ 유류세 조정원칙: ①**유가충격 일부 완화**, ②**단계적 조정**, ③**경유가격 상승폭 최소화**(서민부담 경감)

- 휘발유($\Delta 7 \rightarrow \Delta 15\%$), 경유($\Delta 10 \rightarrow \Delta 25\%$) 유류세 인하 확대* (3.27~5.31)

* 기존 대비 추가 인하폭(원/ℓ) : (휘발유) $\Delta 65$ (763→698), (경유) $\Delta 87$ (523→436)

※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」 국무회의 상정(3.31일) → '26.3.27일부터 소급 적용

-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추가 적용

< 정책수단별 장·단점 >

- ▶ (최고가가격, 유류세 인하) 물가안정 직접효과가 있고 신속대응 가능하나, 에너지 수요 관리에 역행하고 취약가구 보호, 재정부담 측면 비효율
- ▶ (보조금) 취약가구 직접지원 가능, 가격왜곡 없고(에너지수요 중립) 재정부담 측면에서 효율적이나, 물가안정 직접효과가 낮고 신속성 떨어짐

	최고가가격제	유류세 인하	취약계층 보조금
① 물가안정	○ 물가안정 직접효과(단기)	○ 물가안정 직접효과(단기)	X 물가안정 효과 低
② 신속성	○ 국회심의 불필요(고시)	○ 국회심의 불필요(시행령)	X 국회심의 필요
③ 가격신호 기능	X 가격 왜곡(수요관리 역행)	X 가격 왜곡(수요관리 역행)	○ 가격 왜곡 X(수요 중립)
④ 취약가구 보호	X 효과 低(고소득자·대형차 유리)	X 효과 低(고소득자·대형차 유리)	○ 효과 高(취약계층 차등지급)
⑤ 재정부담	X 비효율(소비자 전체 대상)	X 비효율(소비자 전체 대상)	○ 효율적(취약계층 타겟팅)

② **(유가연동보조금)** 화물·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 까지 한시상향(50→70%), 필요시 연장 검토

- 고유가 지속 시 화물·버스 대상 유가연동보조금* 추가지급 근거(화물 자동차법 등 개정[※])를 마련하고, 시도별 예산(주행세)을 철저히 관리하며 시행

* 유가 1,700원/ℓ 상회분의 70%를 지원하는 보조금(현재 지급한도 183원/ℓ)

↳ 경유가격 1,961원 상회시 지급한도 도달 → 추가 보조금 지급 위해 법 개정 필요

③ **(알뜰주유소)** 정유사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가격 변동폭 전수조사(총 1,318개소) 등 관리 강화*

* 고가 판매 주유소 대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, 고가 판매지역 중심 신규모집(26.上) 등

④ **(시장 점검)** 정유사 담합혐의 조사를 신속 진행하고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 시행

②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

① (공급 확대) UAE 원유 2,400만배럴 등 대체수입선 확보노력 강화,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* 등 철저 관리

* 산유국 등 해외기업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희비축시설에 유치하고 비상시 우선구매권 행사

- 자원위기 경보단계 “경계” 격상 검토 및 국제에너지기구(IEA) 합의*에 따른 비축유 2,246만 배럴 방출 이행 준비

* IEA 공동행동결의(3.11일)를 통해 3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, 90일간 비축유 방출

- LNG 스왑*, 필요시 현물 구매 등 카타르산 LNG 대체물량 확보

* 가스공사와 日 에너지기업 JERA 간 LNG 스왑 관련 업무협약서 既 체결(3.14일)

② (수요 관리) 에너지 비상대응반(기후부) 가동해 일일 점검·대응

- 적기 재가동 등 통해 원전 가동률 80% 이상*으로 제고(現 70%대), 석탄발전 상한제약(80%) 해제** 및 석탄발전소(2기) 폐지시기 연장

* 원전 총 26기 중 16기 가동 중 → 6월초까지 정비원전 추가 5기 재가동 추진

** 계절관리제(~3월) 통해 석탄발전 설비용량의 80%로 상한 제한(15~20기) → 3.16일부 일시해제

- 열량조절설비* 가동 및 LNG 발전 최소화 등 수요관리 실시

* 허용 열량 범위 내에서 LPG를 혼입하여 LNG 물량(약 2만톤/月)을 대체(‘26.7월~)

- “1가구 1베란다 태양광” 설치 지원 추진 및 근본적 에너지 안보 강화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

③ (에너지 절약) 수급 관리와 함께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 병행

-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 및 지역별 인센티브* 추진

* 요일제 참여 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·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可

- 대중교통 요금할인(모두의 카드) 검토 및 공공·대기업 시차출퇴근, LNG발전 급증시간대(17~20시)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 확산

-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*에 에너지절감계획** 수립토록 하고 목표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용자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

*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사업장이 전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(5,156개) 사용량의 91.4%(‘24년)

** (주요내용) ①에너지 절감목표 설정, ②불요불급설비 가동제한, ③절약시설 투자 조기시행 등

③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점검 강화 등 공공요금·민생물가 안정적 관리

① **(대응체계 강화)** 중동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·가공식품 전반 및 20개 품목*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해 집중관리(23→43개)

*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 + 시설농산물, 택배이용료, 외식서비스 등

- 민생물가 TF 「중동전쟁 물가대응팀」을 신설하여 점검 추진

② **(공공요금)** 상반기 중앙공공요금 동결, 택시· 시내버스·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*해 상반기 동결 원칙 하 적극 관리

* 지역경제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인상시기 하반기로 조정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요청

③ **(수급 안정)** 쌀, 계란,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노력 강화

- (쌀) 정부양곡(3.13~, 10만톤)을 신속히 공급하고, 수급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공급(최대 5만톤) 검토

- (계란) AI 확산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(3~4월중) 추진

- (고등어) 수입선 다변화(칠레산)를 통한 고등어 공급확대 추진(4~5월중)

④ **(할인 지원)** 쌀, 계란, 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(최대 50%, 4~5월)

⑤ **(관리 강화)** 민생밀접품목 일일특별물가조사 실시(~4월, 데이터처), 불공정거래 엄단, 재고물량 점검 및 업계소통 지속

- (돼지고기) 대형가공업체 재고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담합업체 제재 강화,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

- (가공식품)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

* (제과·양산빵·빙과류) 4개업체, 19개 품목 가격 △100~400원(최대 △13.4%) 인하 예정
(식용유) 6개 업체, △250~1250원 인하 예정 (라면) 4개 업체, △40~100원 인하 예정

- (담합조사) 인쇄용지·달걀·밀가루·전분당 등 민생 담합사건 상반기 내 심의 완료, 체감도 높은 신규품목 지속 발굴·점검

2. 공급망 관리

◇ 공급망 대응 거버넌스 강화해 나프타·요소 등 중동 高의존 품목 집중 관리

① 공급망 위기대책본부 즉시 가동, 수급조절·금융지원·모니터링 강화

① (거버넌스) 범부처 총력대응 위해 경제부총리(본부장) 중심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*(공급망안정화법 제32조) 신설·가동(3.25일)

*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품목별 실무대책반(반장: 재경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) + 외교부 해외동향 및 대응지원반 등 운영

- 품목별 수급상황 및 파급영향,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 강구

② (수급조절) 대체수입선 확보 등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병행

- 재외공관, 코트라 등을 통해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, 적정수준의 비축물량 확보,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 추진

③ (금융지원) 공급망기금 내 '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'을 신설해 대체수입, 긴급운영자금 등 지원(1.5조원 지원 목표)

- 기업 대체수입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시 차액만큼 대출을 확대하고, 금리 지원폭 확대(최대 $\Delta 2.3\%p$ 우대금리 제공)

- 중동 피해기업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, 기존 대출 만기 도래시 대출만기 연장(피해 예상기간 등 고려)

- 대출심사 Fast-track을 가동해 피해기업 최우선 심사, 품목별 통합심사 등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

* 先대출승인·後기금운용심의회 사후 추인(500억원 이하), 심의회 수시운영 등 병행

④ (위험요인 탐지·대응) 중동 高의존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특히, 요주의 중동 高의존 품목은 일단위로 수급·가격을 점검(소관부처)하고, 해외 특이동향 발생시 즉시 전파(재외공관)

- 조기경보 전산시스템 운영('26.下 시범운영) 및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(GVC) 분석 등을 위한 공급망센터 신설 검토

② 나프타·요소·비철금속·유가연동제품 등 핵심품목별 비축 및 수급관리 강화

- ① **(나프타)** 공급망 위협 가시화된 나프타는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(3.23일)해 파생상품 파급효과 분석, 지원 확대 등 전방위 대응
 - 수급상황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(수출통제 등)를 시행(3.27일)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 마련
 - 나프타 취급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및 필요시 수입 신용장 한도 확대
 - 지역축제·행사 다회용기 전환 및 범국민 캠페인*(4월~), 우수 감량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

* (예) 서울하프마라톤('26.4.27) : 다회용컵 2만개 지원·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광고 등 추진
- ② **(요소·요소수)**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금지 시행(3.27일) 및 불법·부당행위 단속 실시
 - 기업간 재고 물량 판매 유도, 요소 수입 확대(베트남, 일본) 노력을 통해 수급불균형 해소 추진
 - 일일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상황 점검 및 필요시, 소규모 재고 부족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물량 방출
- ③ **(비철)** 알루미늄 8천톤 추가구매, 연간 공급계약 확대(1→1.2만톤) 등 비축물량을 확충하고, 긴급배정(방출한도 초과) 실시로 기업 지원
- ④ **(유가연동제품)** 아스콘, 종량제봉투, 건설자재(알루미늄 소재) 등 가격·공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가격 관리 강화
- ⑤ **(의약품·식품)**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식의약품 포장재 수급 동향 및 생산 차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, 필요시 규제 개선 지원*

* (예시) 식품 정보가 인쇄된 포장지 외 대체포장지 사용 허용 등

3. 취약부문 피해 지원

◇ 예산 직접지원 외에 **금융·제도** 등 **정책수단**을 **총동원**해 피해 수출 중소기업, 소상공인·농어민 등 취약계층, 피해 업종·지역 등 **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강화**

①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·물류비 직접지원 확대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
① **(정책금융)** 기 운영 중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4조 원+a 확대(20.3→24.3조 원; 산은 +0.5조원, 기은 +0.5조원, 수은 +3조원)

-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운전·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* 확대

* 수은 위기대응프로그램(금리 최대 △2.2%p 감면), 산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(최대 △0.7%p 감면)

-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완화 지원대출* 및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** 확대

* 기은금리 최대 △1.3%p / ** 기은금리 최대 △1.0%p 감면

기관	프로그램	대상	금리/조건 우대	규모(조원)
산은	■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	수출 중소·중견	금리 최대 △0.7%p	+0.5
기은	■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	중소	금리 최대 △1.3%p	+0.3
	■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		금리 최대 △1.0%p	+0.2
수은	■ 위기대응프로그램	수출 중소·중견	금리 최대 △2.2%p	+3.0
합 계				+4.0

② **(중진공)**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(2,500억원) 및 **기보**보증지원 우대*

*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 상향(85→95%), 보증료율 △0.3%p 감면

③ **(한은)** 저신용 중소기업 대상 저리 대출* 통해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, 추후 지방 중소기업 등 지원 확대 등 검토

*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조원

④ **(민간금융)** 은행 등 금융권의 다양한 자체 피해지원 프로그램 마련 유도(예: 피해기업 자금공급 확대, 금리·수수료 우대 등)

- 서류요건 완화, 긴급접수창구 운영 등 통해 피해기업 대상 보험금 신속지급

⑤ (물류비용)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(산업부·중기부·해수부 등)을 지속 운영해 기업별 수요를 선사와 매칭하여 원활한 물류 지원

- 기존 수출 바우처 통한 물류비 지원 확대(최대 3 → 6천만원)
- 긴급 수출바우처*(코트라·중진공) 통해 물류비 지원항목 확대,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도 피해 확인 시 추가지원

* (대상) <現> 국제운송비 한정<최대 6천만원> → <改> 위험할증료·우회운송비 등 별도한도 부여
(검토기간) <現> 기존 신청후 1개월 이상 소요 → <改> 신청후 3일내 지원 결정<패스트트랙>

⑥ (지원체계) ①각 부처·기관이 기업애로 신속해결, ②다부처 복합애로는 재경부 내 관계부처 합동 수출플러스 지원단이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소*

*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의 편의와 접근성을 보장하되 접수된 창구와 관계없이 소관 부처·기관으로 연결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

<부처·기관별 중동전쟁 관련 기업 애로 지원 현황>

- ▶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(중기부), 중동전쟁 데스크(수은), 수출기업 물류애로 비상대책반(무역협회), 중동전쟁 긴급대응 데스크(코트라), 보건의료사업 피해 지원센터(보건산업진흥원) 등 중동전쟁 관련 전담 창구 설치 운영중
- ▶ aT센터,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등 중동 관련 애로 처리 중

②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·농어민·화물·여객 등 취약계층 지원 지속

① (중소·소상공인) 中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* 시행(중진공, 3.20일~) 및 연료비·공과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**(잔액 740억원) 신속집행

* (대상) 올해 원금상환 도래 + 원부자재·상품 수입 또는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(지원)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 1년 연장, 가산금리 미적용

** 차량 연료비, 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등), 4대 보험료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가능

- 매출 감소(△15%^{이상})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(최대 7천만원)

② (농어민)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(2,000억원, 이자지원) 및 일시적 경영위기 직면한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* 지원 지속

* (조건) 고정 1.8% 또는 변동금리로 저리자금 지원 / (잔여예산) 181억원 규모

③ **(화물·여객)** 영업용 화물차*(심야)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(도로공사 관리) 통행료 1개월 면제

* 교통분산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심야(21~06시) 할인(약 50%) 중 → 면제로 확대

- 안전운임 신고센터(2월~) 등 통해 적정운임 미지급 행위 엄정 단속
-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*(186억원, '26년) 지원
- * 보조금 = [現 경유 유류세(원/리터) - '01.6월 당시 경유 유류세(183.21원/리터)] × 경유 사용량(리터)
- 국가보조항로(29개) 및 적자항로(13개) 등 대상으로 유류비 포함 운항결손금 지원해 항로단절 방지(249억원, '26년)

④ **(청년)** 취업·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강화·경험제공·회복지원을 위한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을 4월중 발표 추진

③ **고유가 취약업종 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둔화 우려에 선제 대응**

① **(업종)** 업종별 고용위기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* 지정 검토, 고유가 영향 업종 중심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 점검

*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(일 6.8→7만원),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(중위소득 100%) 면제, 생계비용자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상향 등

- **석화**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접수 후 3일 이내 신속 인가*

* (사유)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수습 또는 예방, 생명보호 및 안전 확보, 시설·설비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, 업무량 폭증 및 단기간내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·손해 우려 등

- **해운** 국적선사 대상 운영자금대출 무담보 보증 및 긴급자금 지원 추진(기존 위기대응펀드 2조원 활용, 해진공)

* 원리금 상환 연장, LTV 비율 상향(60%→최대 90%)도 병행

- **항공** 중동전쟁 등 외부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감안해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* 한시 유예**

* 재무구조 개선명령 시 2년 내 조치 필요(미조치 시 면허 취소, 과징금 부과 가능),

** 명령받았던 항공사(現 1개사)는 조치기간 3개월, 새롭게 개선명령 받게 될 항공사는 6개월 유예

- **해외건설** G2G 협력, 법률컨설팅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해결지원, 유사시 대사관과 협력해 접경국 비자발급 등 대피 지원
- **조달기업**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예외적용 및 조정절차 간소화*, 피해기업 대상 납기 연장 및 대금·선금 최단시일 지급

* 산업별 조합의 원가계산 결과를 회원사에 일률적용, 대표품목 가격을 유사품목에 적용 등

② (지역) 지역 산업·고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산업·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 검토

- *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현황 : ▲전남 여수(석화, '25.5.1.~'27.4.30.), ▲충남 서산(석화, '25.8.28.~'27.8.27.), ▲경북 포항(철강, '25.8.28.~'27.8.27.), ▲전남 광양(철강, '25.11.20~'27.11.19.)
- *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현황 : ▲여수·광주 광산구('25.8.28.~'26.8.27.), ▲서산·포항('25.11.21.~'26.5.20.), ▲울산 남구('26.1.12.~'26.7.11.), ▲전남 광양('26.2.13.~'27.2.12.)
- '추경 성립 전 집행' 제도 활용해 추경예산 교부 시 최대한 신속 집행, 내수 활성화 위한 지역별 소비진작 사업* 적극 추진
- * 예시: 페이백쿠폰(대구), 통큰세일(경기) 등

산업·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지정 시 지원내용

구분		주요 지원 내용
산업	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(산업부)	1) 긴급경영안정자금,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2) 정책금융지원(대출 만기연장, 보증특례 등) 3)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4) 관세청 세정지원(납부기한연장, 분할납부 등) 5)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
	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(산업부)	1) 이전·창업·사업장 신설시 법인·소득세 감면 2)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견기업 확대 적용 3) 국세 납부기한 연장(2년 이내) 등 4) 공유수면 점·사용료 50% 감면 5)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등
고용	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(노동부)	1)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휴업수당 1/2~2/3 → 선제대응지역 6/10~8/10, 위기지역 2/3~9/10) 2) 사업주훈련지원 단가 인상(40~100% → 선제대응지역 70~130%, 위기지역 90~150%) 3)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(5년간 300→500만원, 자부담 15~55→0~20%) 4) 지역고용촉진지원금(1년 임금의 50%) 지원 가능
	고용위기지역 (노동부)	5)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요건(중위소득 100%) 일부 면제 6)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(年 1→2천만원) 7)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부한도 상향(年 2→3천만원), 융자기간(최대 5→8년)

4. 외환 · 금융시장 안정

◇ 고유가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외환·금융시장 안정적 관리와 함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총력

① 환율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

① (외환수급) 24시간 모니터링 철저 + 수급 관련 정책 신속 추진

- 개인 외환안정 세법* 조속히 입법 및 국내복귀계좌(RIA) 등 상품 조기출시(3.23일), 연기금 국민연금 New Framework 신속 마련(4월)

* 조특법·농특법 개정 추진중(3.18일 법사위 既 통과) : ①국내주식복귀 계좌(RIA) 및 ②환헤지 과세 특례 신설, ③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(95→100%)

② (외국인투자)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획기적 개선

- WGBI 편입(4.1일 편입) 이후 자금유입 상시점검체계 가동, 日 등 주요 투자자의 국내투자 지원 위해 절차 개선 지속*

* (예시) 外人 증권대금 결제시 일시적 자금부족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방안 마련 추진

- 재경부 내에 'MSCI 전담조직' 구성해 외환·자본 제도개선*, MSCI·투자자 소통 정례화 등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

* 외환시장 24시간 개장,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, 통합계좌 활용 제고 등

② 관계기관 공조 하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·점검, 리스크 관리 강화

① (증시) 인위적 주가 부양 지양, 시장 불안 틈탄 가짜뉴스 유포 및 시세 교란 등을 집중점검*하고 적발 시 무관용 엄벌

* ① 중동전쟁 진정 시까지 관련 가짜뉴스·풍문에 대한 집중감시기간 지속 운영
② 신고포상금 상한(불공정거래 30억원, 회계부정 10억원) 폐지,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강화 병행

- 자본시장 펀더멘털 강화 위한 체질개선 노력*도 가속화

* 기업가치 훼손행위 방지, 중복상장 원칙 금지(2분기 세부규정 마련),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(하반기) 등

② (채권) 긴급바이백(5조원) 등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고,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고채 순상환 추진

* 한은도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 실시 계획

- 「100조원+α 시장안정프로그램」 적극 집행 및 필요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운용규모 확대 방안 사전 준비

③ (리스크 점검) 금융권 전반 대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중 실시 완료, 리스크요인 및 대응계획 점검·확충

참 고

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

□ (세율조정) 수송용 유류(휘발유·경유)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하고(4월 → 5월 종료), 그 인하폭도 확대

○ 현행 유류세 인하폭 대비 추가 인하폭(VAT 10% 포함)
: 휘발유 △65원/ℓ, 경유 △87원/ℓ

<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>

(단위 :원/ℓ)

유종	인하 전 탄력 세율	'21.11.12. ~ '22.4.30.	'22.5.1. ~ 6.30.	'22.7.1. ~ 12.31.	'23.1.1. ~ '24.6.30.	'24.7.1. ~ 10.31.	'24.11.1. ~ '25.4.30.	'25.5.1. ~ 10.31.	'25.11.1. ~ '26.3.26.	'26.3.27. ~ '26.5.31.
		△20%	△30%	△37%	휘발유△25%	△20%	△15%	△10%	△7%	△15%
					경유△37%	△30%	△23%	△15%	△10%	△25%
휘발유	820	656(△164)	573(△247)	516(△304)	615(△205)	656(△164)	698(△122)	738(△82)	763(△57)	698(△122)
경유	581	465(△116)	407(△174)	369(△212)	369(△212)	407(△174)	448(△133)	494(△87)	523(△58)	436(△145)

* ()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

□ (적용기간) '26.3.27일 0시(2차 최고가격 적용 시점) ~ '26.5.31일

□ (향후계획)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('26.3.31일) 등을 거쳐 공포일('26.4.1일 예정)부터 시행하되,

○ '26.3.27~공포일 전일(3.31일 예정) 반출·수입신고분에도 유류세 추가 인하 소급 적용

→ 유류세 추가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·공제

□ (기대효과) 최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유류세 인하를 통해 완화

○ 특히, 산업·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 적용